

---

# '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---

2024. 1.

## 목 차

1. R&D·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... 1
2. 인적용역(파견·도급)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반대 ... 2
3. 면세 식료품 매입세액공제 개선 건의 ..... 4
4.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..... 6
5.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제외 기준 완화 ..... 8
6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..... 10
7.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..... 11
8.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... 13

## 1

## R&amp;D·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

## 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, 제9조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차등 운영 중

<R&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(%)>

	R&D세액공제				통합투자세액공제(시설투자 등)			
	당기분			증가분	기본공제			추가공제 (기본공제 2배 한도)
	중소	중견	그 외		중소	중견	그 외	
일반연구개발	25	8~15	2	중소50, 중견40, 그 외 25	10(12)	5(7)	1(3)	3(10)
신성장·원천기술	30~40	25~40 (코스닥)	20~30	-	12(18)	6(10)	3(6)	3(10)
국가전략기술	40~50	30~40	30~40		25	15	15	4(10)
중견 적용범위	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				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			

\*    ( )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'23년 1년간 한시 적용하였으며 '24년 일몰 연장 예정

-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&D 및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세제지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
  -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.6%가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지만, 현행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규모에 따라 R&D 및 투자 세제지원을 차등

## □ 건의내용

- R&D 및 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

## □ 관련법령
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

## □ 현 황

- (현 행)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개인의 인적용역 또는 개인·법인 등이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중 일부\*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
  - \* 국선번호인 등의 법률구조, 기재부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·기술연구용역 등
- (개정안) 부가령 개정안은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를 취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파견·도급 용역을 포함
  - \*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아·자목 신설

## □ 문제점

- 파견·도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경우 공급업체는 장비·자재 등 매입 시 발생하는 ‘매입세액공제’를 적용받지 못해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
  - 사내하도급 관련 업종은 낮은 파견수수료 등으로 인해 순이익이 매출액의 1%에 불과해 비용증가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
  - 실제 HR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의 87.7%는 부가세 면세가 실행되면 비용증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애로·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, 87.2%에 달하는 기업이 면세 도입을 반대
- \*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업 부가세 면세에 대한 사업자 설문조사 '24.1월

## 사례

- 매출 1,000억 원의 공급사업자의 경우, 평균 매입세액공제율 17.8%\*를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17.8억 원의 손실이 발생, 해당 업종의 평균 순이익이 1%(10억 원) 수준임을 고려하면 영업적자 전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

- 사내하도급 거래형태가 기업 간 거래(B2B)임을 고려할 때, 비용증가를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워 공급자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함
- 국내 사내하도급 인력 규모가 1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고용창출에 기여가 큰 상황에서, 관련 업종의 수익성 악화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 하락을 초래할 우려
  - \*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수 101.1만 명(전체의 18.1%)을 토대로 추정 (고용노동부,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, '23.9월)
- 감소한 수익성 만회를 위해 기업의 원가절감이 불가피하며, 이는 인력 규모 축소를 유발해 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
- 특히 개정령(안) 자목은 인력만 제공하는 불법과건과 달리 장비·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물건을 제조하는 진성도급업자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진성도급을 허용하는 고용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
- 개정령(안)의 입법취지는 인적용역 확대이나, 공급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 사용자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 비용 변화가 적고, 용역단가 상승에 의해 발주인력이 축소될 수 있어 취지 달성이 어려움

## □ 건의내용

- 인적용역(과건·도급 용역)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철회

## □ 관련법령

-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, 별표1

## □ 현 황

- 물가안정을 위해 '22.7월부터 '23년까지 간장, 된장, 고추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)
- 정부는 '23년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면서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간을 '25.12.31까지 연장

## □ 문제점

-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해당 식료품 생산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  - 과세가 면세로 변경됨에 따라 면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공통매입세액공제\* 및 의제매입세액공제\*\*에 대한 불공제 금액이 급증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상 부담 가중
- \* 공통매입세액 :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.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필요
- \*\* 의제매입세액 : 농·축·수·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를 제조·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

## 사례

장류전문기업 A사는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'22년(7.1~12.31) 50억원, '23년 106억원의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. 면세 이전 5% 이상이던 영업 이익률이 면세 이후('22년 하반기부터) -0.4%로 적자로 전환(약 8억원)하였으며 '23년 적자 규모는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
- 물가안정을 위한 면세 취지는 공감하나 면세 식료품 생산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책 마련 필요

## □ 건의내용

-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면세 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 삭제
-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\* 생산기업의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

\* 데친 채소류, 김치, 단무지, 장아찌, 젓갈류, 게장, 두부, 메주, 간장, 된장, 고추장

## □ 관련법령
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

## □ 현황

- 수출 비중 등 요건\*을 충족하는 제조 중소·중견기업(매출 3천억 원 미만)이 물품 제조·가공을 위한 원재료 등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

\* ①중견기업: 30% 이상, ②중소기업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

## □ 문제점

- 수출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, 공급망 재편, 3高(고환율, 고금리, 고물가) 등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'23년 수출실적 악화\*를 겪었으며,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성 저하\*\*를 유발

\* '23년 수출실적 전년 대비 7.4%(509억 불) 감소(산업부, 2023년 연간 수출입동향)

\*\* 한국 경제성장률(KOSIS): ('21년) 4.3% → ('22년) 2.6% →('23년) 1.4%

- 고환율 및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수출 활력을 제고할 필요
-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공제가 아니라 납부 시기만 연기하여 세수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효율적
- 그러나,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%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탓에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제도 활용이 여의치 않음
- 또한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조건도 적용되어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7.3%(402개사)에 불과



< 수출비중 구간별 중견기업 분포 현황 >

구 분	20% 미만	20% 이상~30% 미만	30% 이상
수출비중 구간별 매출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	976개	118개	402개

- 중견기업의 수출금액은 1,239억 불로 전체 수출 금액의 18.2%를 차지하고, 수출 증가율이 타 기업군보다 높아\*,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중견기업 적용요건을 완화해 수출 증가를 견인할 필요

\* 기업규모별 수출 증가율(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): 대 6.0% 중견 11.8% 중소 0.5%

## □ 건의내용

-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·중견기업 기준 완화
  - (현행)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 비중 30% 이상 중소·중견기업 ⇒ (건의)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 비중 20% 이상 중소·중견기업
-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 신설
  - (현행) 중소 수출액 50억 원 이상 ⇒ (건의) 중소 50억 원 중견 100억 원 이상

## □ 관련법령
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

## □ 현황

- (현 행) 부가가치세법은 수출 중소기업\*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 최근 3년간 「조세범처벌법」, 「관세법」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 제외\*\*

\*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, 수출비중 30% 이상 중견기업

\*\* 조세범처벌법, 관세법 위반 외에도 최근 2년간 관세·국세 체납사실 또는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을 것

- (개정안) 부가령 개정안은 납부유예 요건 합리화를 위해 관세법 등 위반에 따른 적용제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

## □ 문제점

- 수출 제조기업은 원재료 수입 및 완제품 수출 과정에서 수백~수천 건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, 상표, 포장 등을 신고

- 관세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기업의 부당이익 추구 등 목적과 상관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

- 타법과 달리 경고 혹은 시정조치 등 계도 과정이 없이 처벌이 이루어져 경미한 과실을 범한 기업의 구제가 불가

\*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하고,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,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(대외무역법 제33조의2)

-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극히 악화

사례	
○ B사는 비철금속 제련·정련 및 합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,800억 원에 달하는 연 매출의 80%를 수출이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수출기업임	
○ B사가 '16년부터 '21년까지 수출입 신고한 페로바나듐과 관련해 중국산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오기된 것이 발견되어 관세법 허위신고죄로 담당자와 B사가 각각 벌금 육백만원을 납부함	
○ 해당 기간 B사가 페로바나듐 수출신고를 한 200여 건 중 원산지가 잘못 기재된 건은 일본으로 수출한 단 1건으로 담당자 착오에 의한 단순 과실이었으며, 일본은 FTA 미체결국가이므로 원산지 오기에 따른 관세 이득 등이 전혀 없었음	
○ 연간 영업이익이 31억 원에 불과한 B사는 관세법 처벌 사실로 인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을 받지 못해 매월 15억~20억 원*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 자금 유동성 애로 발생	
-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까지 통상 2개월 가량 기간 소요되며, 비용 규모를 줄이고자 분기별 납부를 월별로 변경한 탓에 일선의 업무도 가중	
*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시 매월 1~2억 원 납부	

- 경미한 과실에 대해 관세법 상 제재는 부과되지, 부가가치세법 등의 수출기업 특례는 허용하여 부진한 수출 및 경제 현황을 타개할 필요
  -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'23년 수출실적 악화\*를 겪은 수출기업에 세제상 편의를 제공하여 수출 활력 증진 도모
- \* '23년 수출실적 전년 대비 7.4%(509억 불) 감소(산업부, 2023년 연간 수출입동향)

## □ 건의내용

- 경미한 과실\*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한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허용
  - \* 고의·상습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
- 관세법 등 위반 사실이 있는 수출기업(수출비중 50% 이상)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2년간 한시적 허용

## 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정부는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\* 및 적용요건\*\* 등을 확대지원

\* ('22년 개정) 100억원→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 600억원

\*\* ('23년 개정) 사후관리요건 업종 요건 중분류→대분류

- 조특령 제27조의6 제8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의 상장\* 또는 합병에 따른 상장\*\*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납세자의 선택으로 100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 허용

\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(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)

\*\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(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)

- 조특법 상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된 것에 반해령 제27조의6 제8항은 100억 원을 한도로 해 불일치로 인한 혼란 발생

- '22년 개정 전까지 조특법 제30조의6과 조특령 제27조의6⑧의 특례 한도는 100억 원으로 동일

- 법령 간 일치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, 가업승계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족할 수 있게 정비할 필요

## □ 건의내용

- 조특령 제27조의6⑧의 한도를 법과 동일한 금액(300~600억 원)으로 일치

## □ 관련법령
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1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
  - \*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
-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해왔음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
 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등 전통산업은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, 서비스업은 한정된 일부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

<제조업-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>

표준산업분류(대분류 기준)	가업 해당 업종
광업(05~08)	광업 전체
제조업(10~33)	제조업 전체 (단, 직접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세부요건 충족 필요)
건설업(41~42)	건설업 전체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	연구개발업(70), 광고업(713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(714) 등 5개 업종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	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,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(7531) 등 7개 업종
교육서비스업(85)	유아 교육기관(8511), 사회교육시설(8564) 등 4개 업종

- 특히, 서비스업은 동종·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

사례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C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, 청소,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·관리하고 있음(표준산업분류상 "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"에 해당)</li> <li>○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"소독,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(74220)"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(단, "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(74212)", "고용알선업(75110)"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)으로, 유사·동종사업("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", "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" 등)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</li> <li>○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, 일반 골프장은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

-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·금융 등 지원 제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의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가업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할 필요

\*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(120대 국정과제, '22.7월)

-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이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지속하고, 나아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

## □ 건의내용

-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  - **全**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\*만 열거

\*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
## □ 관련법령

- 상증법 제71조,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금전, 유가증권,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\*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,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

\* 금전, 유가증권, 납세보증보험증권, 납세보증서, 토지,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, 건설기계 등

- 비상장주식은 부동산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나, 과세당국에서 물납주식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까다로운 절차\*를 마련한 탓에 실질적으로 허가 받기 어려운 상황

\* 국세청, 캠프,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'물납허가협의체' 운영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관리

- 비상장 중견기업(83.1%)\*은 세부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 위협 우려

\* 중견기업 현황('22년 결산기준) : **비상장 4,647개(83.3%)**, 코스피 450개(8.1%), 코스닥 475개(8.5%), 코넥스 4개(0.1%)

### 사례

- 1975년 설립하여 50년 간 한 가지 산업에만 매진한 장수기업 D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는 등 꾸준히 성장함. 창업주에 이어 2세가 경영에 참여해 20여 년간 가업을 이어가며 매출 성장률 12.8%, 영업이익성장률 98.9% 등 훌륭한 경영성과를 달성했으나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는 여의치 않은 상황.
- D사의 기업가치는 2,300억 원(순자산"자산총계-부채총계" 기준으로 설정)으로 창업주의 지분 가치는 약 1,030억 원에 달함.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430억 원에 대한 상속세 215억 원을 납부해야 하며 지분 외 상속재산을 포함하면 상속 규모는 더욱 증가함. 이러한 상황에서 D사는 비상장기업이라 납세담보 마련이 어려움

-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
-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
- \*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(홍석준의원안, 의안번호 제2104118호)

## □ 건의내용

-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
- \*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허용 기준 별도 마련  
(예시) 재무상태가 건전하고, 불성실 납부 이력이 없는 중소·중견기업